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민선 7기 도정 4개년계획 1주년 점검보고서

2019. 06.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1부. 민선7기 1년을 맞이하며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3
- 2.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점검보고 8

2부. 목표 및 전략별 점검

- 1. 다시 뛰는 경남 경제 13
- 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29
- 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41

3부. 6대 중점과제 점검

-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52
-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56
-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58
-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61
-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63
-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65

4부. 과제추진 점검

- 1.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운영 69
- 2. 투자계획 72
- 3. 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조직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조례 73
- 4. 2019년 경남도 중점과제 및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77

제1부

민선7기 1년을 맞이하며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정치적 동향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를 통한 신임 도지사의 취임
 - 1년 3개월 동안 도지사 공백상태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도정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가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운영의 계기가 마련됨. 지역정치의 특색으로 보수 정당 출신이 도정의 책임자로 지속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배경으로 한 도지사가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에서 경남의 유권자 투표율은 65.8%로 전남(69.3%), 제주(65.9%)에 이어 높은 투표율을 보여, 경남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것임.
 -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서 특히 경남도지사의 선거결과에 대해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됨. 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후보는 총투표자의 52.8%를 득표하여 당선됨. 이것은 한국의 지방정치의 지형을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으로 도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도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분포변화
 - 경상남도의 역대 도의회 의석분포는 보수정당(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절대우위를 차지하여왔음. 그러나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 도의원들의 정당분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 (더불어민주당 34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 경남의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7명이 당선되어 경남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배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
 - 이와 같은 도의회의 의석분포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배경의 변화는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안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도지사의 법정구속과 도정복귀
 - 2018년 7월 2일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김경수지사는 도정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남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한 도정의 수행에 들어감. 신임지사의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한국갤럽이 2018년 9월에서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러나 김경수지사는 ‘드루킹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받는 도중 2019년 1월 30일 법정구속되어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되었음.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보석결정을 받아 4월 17일 도정에 복귀함으로써 77일간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정상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

■ 경제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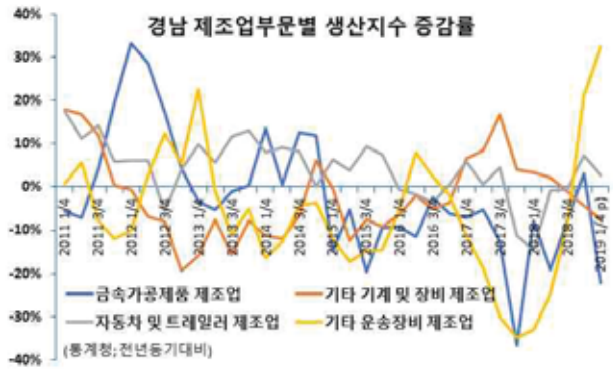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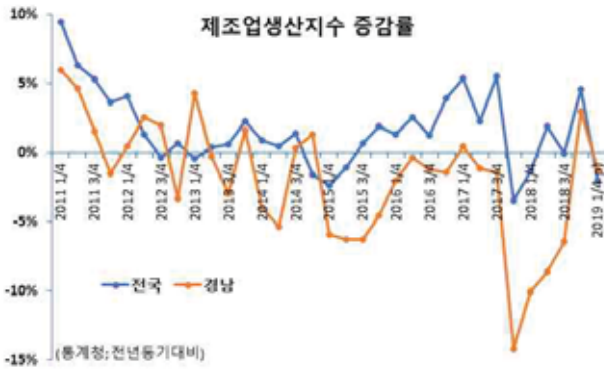
● 경남의 전반적인 경제여건

-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었으나, 이러한 실적 자체가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저효과와 시효가 명확한 건설 경기에 힘입은 바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광역시도 기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수준임. 지난해부터는 조선업에서 수주실적이 개선되는 등 하락하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였으나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대외 영향을 크게 받는 경남 경제에 다시금 하락기조가 나타나고 있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8 I	2018 II	2018 III	2018 IV	2019 I
실질성장률(전국)	2.8	2.9	3.1	2.7	2.8	2.8	2.0	3.1	1.8
실질GRDP 성장률	0.4	0.2	1.5	-	-	-	-	-	-
광공업생산지수	-5.7	-1.0	-3.1	-4.6	-7.7	-7.2	-5.8	2.9	-2.1
서비스업생산지수	3.7	2.2	0.9	0.8	0.6	0.7	-0.1	2.1	1.0
소매판매지수	4.7	0.9	-1.2	-0.5	0.8	0.0	-2.3	-0.5	-2.0
건설수주	-4.1	70.1	-19.1	-39.7	-53.4	-58.0	-30.1	23.8	-59.7
수출	-8.1	-3.7	31.4	-32.3	-2.1	-54.5	-43.7	-6.6	-9.4
수입	-21.6	-18.6	2.5	16.0	16.2	15.4	10.0	22.1	-1.7
소비자물가	0.6	0.9	1.6	1.4	0.8	1.4	1.6	1.7	0.4
고용률	60.6	60.6	60.9	61.4	59.8	62.0	62.1	61.6	60.6
실업률	2.6	3.3	2.9	3.0	3.4	3.1	2.7	2.9	4.4
인구순이동(명)	5,105	1,772	3,979	-5,810	-2,338	-360	-1,618	-1,494	-3,806
유입(천명)	143.7	134.7	137.3	123.7	38.9	29.1	26.8	28.9	37.6
유출(천명)	138.6	133.0	133.3	129.5	41.2	29.4	28.5	30.4	41.4

●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현황

-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조선, 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역내 주력 산업을 형성하고 있음. 경남 제조업은 2015년 1분기 이후 현재까지 2개 분기를 제외하고는 매분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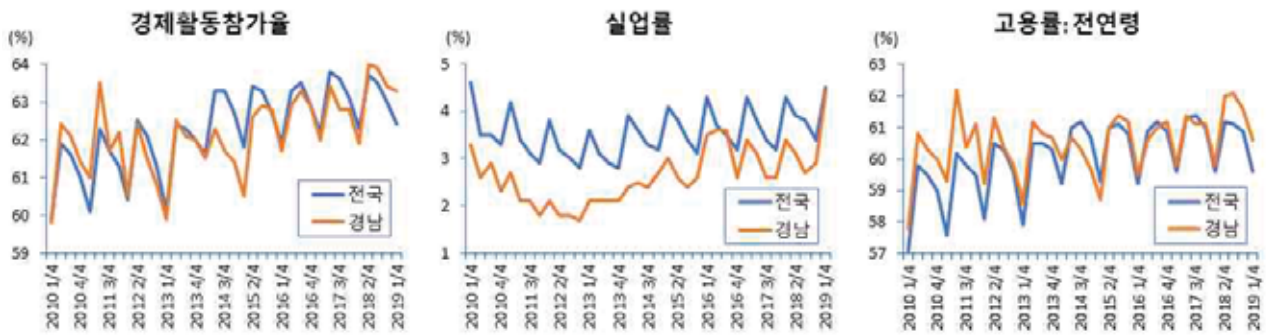


- 지난해부터 조선업 수주 개선으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급속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분야의 회복세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뚜렷이 회복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음. 경남의 많은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조선업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나친 조선산업의 의존 산업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음.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로 제조업의 모멘텀을 삼아야 함.
- 경남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기는 하나 그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2010년 47.2%→2017년 41.7%) 서비스업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41.1%→45.0%).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성장기여도는 낮고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공공행정이나 보건·사회복지업, 각종 생활서비스업 등은 도민의 삶의 수준 제고에도 직결되어 있는 분야인 만큼 도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고용 및 일자리 현황

- 경남의 고용은 지표상으로는(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양호하게 나타나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에 따른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창원 진해구)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2020.4.4. 종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지만 제조업의 역내 중요성과 경남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임. 제조업 일자리가 타 업종 일자리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타지역 유출에 따른 일자리 자체의 소멸을 의미함.

* 이 4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1.5.28. 종료)이기도 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노동부, 2019.6.30. 종료)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제조업이 회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제조업 고용이 기존 호황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생산의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함. 또한 팽창한 서비스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 질적 제고를 정책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야 함.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및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발휘되어야 함.
-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성격상 경남의 고용은 성인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과 청년 노동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정임. 특히 청년 일자리의 확충 및 질적 제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구 순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임. 유의할 점은, 인구 순유출 증가는 유출 증가보다는 유입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임. 즉 제조업 부진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젊은 인력 유입이 줄어든 것임. 향후 경남 제조업 인력수요가 되살아났을 때 경남 내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 훈련을 강화하여야 함.
- 경남의 전체고용률은 2010년 이래 2014년과 2017년 3사분기를 제외하는 전국평균을 약간 웃도는 편이었으나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음. 특히 청년 고용률의 경우 전국의 평균에 비해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후속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기회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경남의 미래성장과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과 미래 성장산업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지역주민 동향

● 4/3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

- 4월 3일 치루어진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지역의 보궐선거에서 현 정부와 김경수지사와 정당을 같이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성산지역구에서 정의당과의 공동후보를 당선시켰으나 통영고성지역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됨
-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은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갈구하고 있음. 통영과 고성은 조선업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곳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 하강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창원성산은 자동차산업과 중공업의 부진이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던 지역에 하강의 고통을 안기고 있음.

- 경제와 민생의 회복과 함께 공정과 통합의 가치에 대해 기대가 표출되고 있음. 현재의 물질적 어려움보다는 도민들은 지도자의 진실성, 특권의 배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사회를 갈망하고 있음. 미래의 일자리 불안이 증폭되어 정치적 불만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 도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드루킹 사건등 부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임이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 22%에 비해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것은 전임지사의 경우, 30%대의 긍정과 50%대의 부정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경남도민들의 신임지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제의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음
- 그러나 2019년 5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직수행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로 19세이상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5.22-26)에서 김경수 지사는 39.9%의 긍정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48.6%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로 확인되었음.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의 정도는 도정수행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임.

2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점검보고

도정4개년 계획의 확정과 추진경과

● 도정4개년계획의 확정

- 2018년 6월 21일 도정 인수 작업과 도정4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함.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4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도정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신임도지사에게 제출함. 이후 도정4개년계획을 8월 16일 도민보고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널리 열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함.
- 도정4개년계획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을 운영원리로 하고 있음. 이러한 비전과 운영원리하에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중심 경남복지’, ‘함께여는 혁신도정’을 3대 목표로 설정함.
-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전략과 46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46개의 과제 가운데, 도지사가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6개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함

● 도정4개년계획의 1년 추진경과(2018.9-2019.5)

- 2018년 8월 16일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확정된 도정4개년계획은 9월부터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각 과제 전담부서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감. 먼저 46개 과제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정하고 이들 전담부서는 협력부서와의 협의하에 전담과제에 대한 세부과제를 각각 식별하여 총 14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함
- 140개의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목표-전략-과제-세부과제의 순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함. 예컨대,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은 1(목표1: 다시뛰는 경남경제)의 전략1(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가운데 과제 1(경제혁신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의 세부과제 ①(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의 번호체계하에 1-1-1-①의 고유번호가 부여됨
- 이들 140개의 세부과제를 각 전담부서에서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제추진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성, 과제목표, 추진개요, 연차별이행계획, 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기술하여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함
- 정책기획관실은 각 전담부서에 작성한 세부과제 기술서를 취합하여 도정4개년계획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간함(2018년 10월)
- 실무부서는 부서별 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서별 과제추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도정4개년계획 전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함
- 정책기획관실은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보고서를 2018년 12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3차례에 걸쳐 발간함

-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발간된 추진상황보고서를 토대로 도정4개년계획 1년차 (2018.9-2018.12) 점검보고서를 2019년 1월 8일 확정함. 그리고 1월 15일 도지사와 간부공무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년도 도정4개년계획 과제이행 점검보고회의를 개최함.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취합하여 발간한 2019년 3월말까지의 추진상황보고서에 근거하여 4월초 1사분기의 과제이행상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분과별로 실무부서와의 간담회를 가짐
- 도지사취임 1주년을 맞아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도정4개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5월까지의 이행상황을 취합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정책기획관실이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분과별 점검활동을 착수함

■ 이행상황 점검활동의 체계 및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 과제이행 점검활동의 체계

- 도정4개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기로 방침을 정함.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 3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도정4개년 계획의 이행 점검과 환류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킴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과제의 주기적인 점검을 최우선역할로 삼고, 운영분과, 기획분과, 경제혁신분과, 민생분과, 문화복지분과, 사회혁신분과의 6개 분과를 구성함. 운영분과는 점검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기획분과는 보고서 작성체계와 작성방법의 확정과 최종보고서의 발간을, 경제혁신분과를 비롯한 4개의 실무분과는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함. 이러한 점검활동을 위한 자료의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은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진이 맡기로 함

● 점검보고서 작성경과

- 2019년 5월 2일 운영분과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2019.7.2.)을 맞이하여 도정4개년 계획이 실무부서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4개년계획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함
- 정책기획관실은 각 실무부서로부터 과제이행상황을 보고받아 5월말까지 취합하여 과제이행 상황보고서를 도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운영분과회의를 통해 결정된 활동의 방향과 일정에 따라 기획분과에서는 2019년 5월 27일 긴급 기획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점검방식과 기술방법, 그리고 작업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논의된 결과를 각 분과위원장에게 통보함.

- 과제 이행 점검은 3단계의 작업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운영분과에서 윤독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점검을 하기로 함. 제1단계는 각 분과에서 해당 과제를 위원들에게 배정하여 과제별 점검을 하고, 제2단계는 각 분과의 분과장과 간사가 전략별로 다시 정리하여 점검하고, 제3단계로 각 분과에서 전략별로 점검된 결과를 기획분과에서 취합하여 검토하는 것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략별로 점검된 결과를 6월 14일 개최된 운영분과회의에서 윤독하는 과정을 거침.
- 6월 14일 운영분과의 윤독회를 통해 전략별로 점검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도정자문위원회의 최종(안)으로 6월 20일 완료함. 6월 20일 완료된 과제이행 최종 점검(안)은 6월 25일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하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보고됨

제2부

목표 및 전략별 점검

- 목표 1은 기술과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경남의 경제가 기술을 수용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여 누구나 공정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 정책목표는 새로운 경제적 영토를 개척하여 성취될 수 있다. 교통과 항만, 공항 등 교통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산업 스마트 전략이 준비되고 착수되어야 한다. 서부경남지역에는 사천과 진주의 항공부품 클러스터, 희유금속을 통해 소재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체제를 보완하는 플랫폼 경제와 사회적 경제영역을 개척한다. 김경수 도정은 서부경남 KTX의 재정사업 확정, 창원외 신항만 추가 지정, 신공항문제의 해결 지향 등으로 속도감있게, 그러나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목표 1이다.

전 략

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추진상황

-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3개 세부과제)
 - 완료 (1): ②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 조직 개편
 - 실행 (2): ①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③ 산업·지역별 고용실천 전략 수립(일자리대책본부 설치 등)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핵심산업 고도화(항공, 조선해양, 나노융합, 로봇 등), ③ 스마트공장 구축 ⑤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 준비 (1): ④ 스마트산단 조성
 - 검토 (1): ② G-MBP 개발
- 3.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7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⑦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 착수 (3): ② R&D 공동연구플랫폼 구축, ③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 ④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 준비 (2): ⑤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치, ⑥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개 세부과제)
 - 착수 (1): ①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개 세부과제)
 - 준비 (1): ①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5개 세부과제)
 - 실행 (2):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 중추도시 육성(혁신도시 시즌2), ⑤ 지역전략 항노화 산업 육성
 - 착수 (2): ③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④ 친환경·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
 - 준비 (1): ② 항공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3)				2	1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5)	1	1		3	
3. R&D체계 혁신과 광역 연구 플랫폼 구축 (7)		2	3	2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1)		1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1)		1			
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5)		1	2	2	

■ 점검의견

●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및 경제혁신체계 구축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모든 직원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지사 임기 내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좀 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적극 추진 및 지역 주도 R&D생태계 전환 필요
-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정책 제안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분과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과(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와 경남테크노파크, 국책연구소 및 대학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위한 대책 강화 필요
-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 수립은 '실행'과는 거리가 멀고, 준비 노력 미흡함
 - 일자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분과 구성이라는 향후 계획이 있으나,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어려움. 경제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 기계 중심 산업에서 ICT융합(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바이오(항노화, 식품, 신약 등), 해양산업 및 관광 분야, 플라잉 개인 수송기기, 양자 컴퓨팅 등의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정책 추진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경상남도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 필요
-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산단 관련 신규 투자에서는 투자 대비 일자리 증가 효과가 더디므로 기존 공장 스마트화는 진행하되, 신규 일자리의 증가세 둔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일자리 대책 관련 정책들과 연계 필요
- 지능형기계 산업과 로봇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 및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예산 확보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석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사업이 아닌 경상남도 주도 사업으로 전환 필요

● 3.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국가 R&D 및 비R&D 예산 집행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 혁신기관, 연구기관, 대학, 지역 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예산 적극 지원 및 장려 필요 ⇒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경상남도 R&D 역량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관련, 최소 1개 및 최대 모든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 新성장 동력 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R&D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부산과 울산 지역과 비슷한 산업 구조로 인하여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므로 지역 중심의 R&D 체계 개편과 연계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기관, 대기업 R&D센터 유치 관련 2020년까지 책정된 예산이 없음. 이전 유인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과기정통, 산업부) 승인도 어렵다는 1차적 한계, 유인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도 문제. 또 이전대상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지역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과 모니터링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예상)
-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경남발전연구원 항만물류연구센터와 관련 용역(동북아 물류R&D센터와 융복합 스마트물류 단지 용역)에 사업 방향과 도의 의지를 잘 담아낼 필요가 있음
 - 대형항만 건설에 따른 지역 어민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부산광역시와 협업을 통하여 원활한 관리 권한 이전 합의안 도출 필요
-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서부 경남 KT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 이후, 후속 조치 수립을 위하여 “남부 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용역 추진 중
 - 적정성 검토(KDI) 이후 신설 역사 유치 관련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즉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노선 조정 요구 및 정차지 역사, 종착지 역 등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론 파악,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6. 서부경남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년 예산 12,814백만 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처 방문과 요청 노력이 필요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2019년 채용목표 21% 달성을 위해 중간 점검(예를 들면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과 이행 촉구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 반영이 필요함
 -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인식 부족(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 사안은 특화발전분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임에도 현재는 정주여건 개선, 배후도시상생발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음)이나 관련 지자체(진주시)의 소극적 태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경상남도 차원의 방안 모색 필요
 -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의 소요 예산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어 추진 속도가 더디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및 부처 간 사전 공감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서부권 개발국 등) 차원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 전략1의 6개 과제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기능강화(분과활동 강화 등), 경상남도의 전략 팀 등 보완이 필요
- 과제별로 ‘타 기관과 협조 필요사항’이 적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경제혁신체계(과제1) 및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 사업확충(과제2)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제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실무T/F와는 별도의 기획단 설치 운영 등 전략적 노력 요
- 또 지역 중심의 R&D체계혁신(과제3)를 마련하여 지역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R&D역량이 높아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경상남도 차원의 R&D 기획 및 관리 등을 포함함 경상남도 차원의 전담 조직(기관) 설립이 필요
 - 향후 지역R&D사업의 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 전략 기능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TP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R&D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주도로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국책 연구소, 대학 및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내 중견, 중소기업 참여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필요, 장기적으로는 BISTEP과 같은 R&D 사업 기획 및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필요
- 스마트공장 보급, 스마트 산단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혹은 제조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고용 친화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공장 공급 보급사업의 경우, 성과 위주의 사업 진행보다는 그간 추진상황 분석을 통해 어떤 효과(고용과 일자리, 기업성과 변동, 컨설팅 인력 운영, 관련인력 양성 콘트롤 타워 설치, 스마트 공장 공급(구축)기업의 성장 등)를 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실태조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잘 분석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향후 정책 집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제안 과제:

- 국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서 직접 기획, 집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도에 가칭 “경제혁신 전략 기획단(T/F)” 구성을 제안
- 지역 제조업 혁신 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가칭 “경남 신성장산업 전략 기획단” 신설 제안
 - 산하에 CoBot(Collaborating Robot)전략 기획단(CoBotSW 플랫폼과 CoBot H/W 관련 기술을 동시에 개발 관련 다부처 예타사업 기획 등),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전략 기획단, 미래형 전기추진 항공기 기술개발(기계식에서 전기식 전환) 기획단 등
-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나 관련 예산 책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혁신도시 개발이익공유제를 활용 가칭 ‘서부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하여 혁신도시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구축 관련 사업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진주·사천·고성·관련 기업 공동펀딩(국가 재정 매칭)으로 항공산업 육성 지원
 - 진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2016년 말 712억 원) 활용
 - 제조업과 농업, 항공대기업과 협력업체, 진주와 사천, 노인과 청년 상생자금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서부경남)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생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추진상황

- 7.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6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채용비리 예방 실행, 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본격 실행, ⑥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실행
 - 착수 (2): ③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착수, ⑤ 경남기반창업투자회사 설립 착수
 - 준비 (1): ④ 부산경남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경남창업사관학교로 목표 변경 유치 준비
-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지원 새일여성인턴 인센티브 확대 실행, ②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실행, 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실행,
 - 준비 (2): ③ 일자리더하기 장려금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예산 요구 의회 미승인 '20년 실행 준비, ④ 경남창업지원학교 유치 준비
- 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
 - 실행 (1):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행: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6)		1	2	3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5)		2		3	
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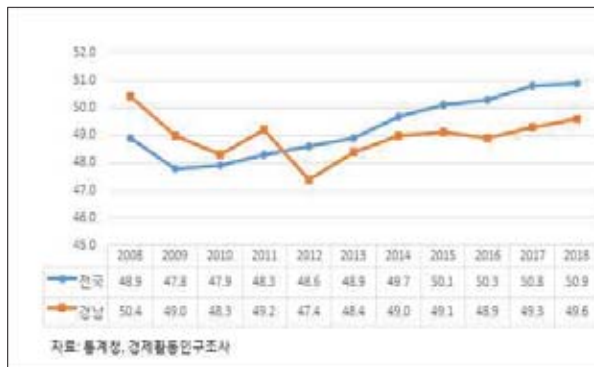
점검의견

- 일부(준비(2) 또는 착수(1) 단계)를 제외하고, 대다수(7) 세부과제는 실행 단계로 나타남. 문제는 이들 과제가 실행 완료되면, 과연 전략2가 이행될 거라 할 수 있는지?
 - 특히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실현되는 성과 점검 및 그 성과가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왜 그런지 그 이유와 기제에 대한 분석과 성찰 요
- 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일자리사업의 하향식 획일적 방법에서 지역이 기획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협력방법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도입된 사업임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안가본 길이기 애로가 많을 것임. 특히 자원 부족한 시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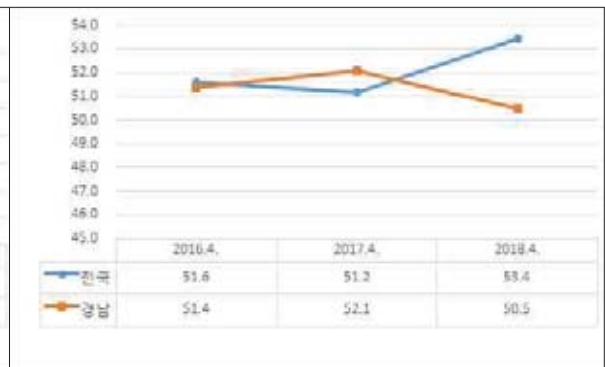
- ‘지역주도’ 역량 증진은 애로 해소와 시행착오의 경험공유와 학습 등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경남여성의 고용률(49.6%)은 전국 여성의 그것(50.9%)을 밑돌고, 15~5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의 비율은 경남 39.2%로 전국 38.4%를 웃돌기에(2012년 이후 비교수치 역전, 2014년 이후 여성고용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전 효과 내지 못함. 왜? <그림 1>), 경남 (기혼)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그림1> 여자 고용률: 전국 및 경남



<그림2> 기혼 비취업 여성(15~54) 중 경단녀 비중: 전국 및 경남

- 종래 경남의 여성고용대책은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아예 경력 없는 여성에 대한 대책은 미약함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그림 2>), 경남에서 15~54세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경력 있는 여성)의 비중은 2016.4. ~ 2018.4. 사이 51.4%에서 50.4%로 하락해, 같은 기간 51.6%에서 53.4%로 상승한 전국 동향과는 차이를 보임.
 - 경력단절이 중요한 여성문제이나, 아예 경력이 없는 여성이 경단녀(경력 있는 여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 경남에서 경력 없는 여성 비중(49.6%)이 전국 평균(46.6%)보다 훨씬 더 높고 최근 보다 더 악화된 사정에 주목 요
 - 예비창업여성 대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사업비 규모가 연 5천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 신중년 대상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복지 인구문제를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시야에서 도차원의 장기 전략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함
- ‘19년 의회 심사에서 불요불급으로 미승인된 일자리더하기 장려금이 ’20년에 그저 다시 요구하면 승인될지 미지수.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이 요청됨
- ‘18년 시니어클럽 11개소 설치에서 ’19년 6개소 증설. 시니어클럽은 전액 시군비로 운영되어 시군재정 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그 대책 마련 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 경남 일자리종합대책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등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사업,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한된 자원을 동원해 목표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획, 평가 과정의 강화와 역량 제고 요
-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 취지 성취 여하 및 일자리 ‘질’에 대한 점검 자료 정비 요
-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 도, 시군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 최근 발표된 경남 밀양하남 뿌리산단 조성 계획은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모델과는 달리, 환경오염 발생 우려로 인한 갈등을 산단 스마트화의 상생협력으로 해결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남(밀양)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평가됨. 이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략 개발에 광역지자체로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과 역량 제고 노력이 요청됨

● 신규 제안 과제 :

- ‘완전히 새로운’ 경남 고용 전략 작성하되 그 결과뿐만 아니라 전략 작성 과정도!
 - 시군과 함께, 상향식 협력 조정에 의해 ‘함께 만드는’ 정신
 - 중앙부처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기관 및 기타 주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 경력 없는 여성 지원:
 - 경단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경력 없는 여성이 경력을 쌓을 기회 증진 대책이 긴요하게 필요함
 - 경남광역 여성새일센터의 기능도 경단녀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경력없는 여성 지원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 보완 요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추진상황

-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개 세부과제)
 - 실행 (6): ①제로페이 도입 실행: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인센티브 확대, 편의 강화 등 경남 전 시군 시행, ③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행, ④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실행, ⑤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실행, ⑥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실행, ⑧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준비 (2): ②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준비, ⑦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 준비
-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실행, ②장기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금융복지제도 확충 실행
- 12. 중소기업 고용 투자 환경 개선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중소기업 시설 설비 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실행, ②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실행, ③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실행
-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개 세부과제)
 - ①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실행, ②사회적 경제 활성화 실행: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개정,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사업 확대. 사회적경제기업발굴, 판로개척 지원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8)		2		6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2)				2	
12. 중소기업 고용 투자 환경 개선 (3)				3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1	

점검의견

-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제로페이 도입 실행과제는 2019년 3월 20일 경남 전 시군에 시행되는 등 도입 초기에도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고, 모집홍보, 인센티브 확대, 편의강화 측면에서, 그리고 타 과제와 연계(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사업) 등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상공인연

- 합회에 대한 위탁 방식의 사업 등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확대 등이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 자금,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경우, 사업 관련 홍보가 더 필요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스케일 업 지원, 제조서비스업 ICT분야 소공인 청년 창업 지원과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확립
 -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제정과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경남1번가」설치를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과제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심의, 자문을 넘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실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 중소기업 시설·설비투자 및 경영안정 자금 확대 사업은 자금 규모 확대, 대출한도 상향 조정,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용도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설명회), 기업통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 또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재원(242억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구직 수요 증대 방안, 지역 청년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조건 향상 등이 전제되어야 함
 - 13.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형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일자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환경(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사업방향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교육 등) 재편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6월 말 공개 예정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에 적시된 과제 실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전략적 추진단위가 필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의 경우, 과제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과 과제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과제(과제 10~12)관련, 기존 중소기업 대상 사업의 경

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며,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 진행 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제 12 중 청년 채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사업들은 경상남도의 청년관련 부서(사회혁신 추진단) 및 관련 사업들과 연계를 통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치 방식의 운영을 핵심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과제 13)의 경우, 1년 간 타 분야에 비하여 민관협치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당사자 조직과 관(경상남도) 사이에 ‘협치’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가칭 “경남 사회적경제육성 전략TF” 신설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추진상황

-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1개 세부과제):
 - 착수 (1): ①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착수: 경남먹거리위원회 구성, 경남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수요 파악과 협의 진행
-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경남 농산물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② 경남 공익형 직불제 추진
-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청년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② 경남형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
-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2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행
 - 준비 (1): ②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홍보 진행
-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1개 세부과제)
 - 착수 (1): ①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착수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1)			1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2)				2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2)				2	
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 (2)		1		1	
18. 스마트양식장 조성 및 어촌 6차 산업화 (1)			1		

점검의견

-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성 강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시군별 수요와 여건 분석, 경남 급식 전반(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분석 자료, 경남 내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현황과 과제 등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마련 요

- 15.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 농산물 수급안정의 관건은 생산량 예측을 통해 출하 이전 품목별 출하량 조절에 책무를 갖고 참여하는 생산자조직과 농협의 협조가 중요.
 - 포전 정리, 산지 폐기 등을 가격 보장 문제는 사후 대책의 일환임. 도내 농협이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생산 계획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요
-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 공익형 직불제 실천 마을의 선정 과정에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소액지원사업과 차별성 부족, 시군 담당부서의 중복성에 대한 현장 문제 제기 검토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 거버넌스 구축에서 차별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와의 협업,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체계 등 먹거리 의제의 연결, 도시(일자리 필요)와 농촌(일손 필요)의 일자리 상생 구조, 청년농업인과 선도농업인 멘토 간의 협력 구축 등 경남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압축 (Compact) 정책으로 차별화 전략 필요
-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자체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종의 양식기술 개발 및 전략개발 필요.
 - 스마트 양식은 해양수산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론에 비해 실용화 단계에선 불완전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단계별 전략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하며, 또한 자동화, 지능화, 정보화에 대한 불완전 요소가 많은 사업으로 위해 요소 분석작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푸드플랜을 비롯 주요 농정시책들은 여전히 도민들 대다수가 잘 모른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론화 및 홍보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신규 제안 과제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향후 경상남도 먹거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연차별 이행 계획을 수립 추진 요
 - 조사분석의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 현재 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생산실태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용역 참여 업체가 농업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 일반 리서치 업체임.

- 경남발전연구원,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현장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와 분석 후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요
- 농촌형 활동가 양성(일자리)
 - 공익형 직불제 도비 예산 증액으로 선정된 마을 리더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을 진행, 청년농업인 및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 및 활동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농촌형 활동가 양성(일자리)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산식품 거점단지와 패류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수산물 가공공장 조성 및 생산위생시설 설비 확대계획(안)은 수산식품 가공 및 생산이라는 공통된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마련 요

- 목표 2는 경남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 정책의 틈새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역을 타겟으로 하거나, 상이한 정책들을 통합하여 성과위주로 집행체계를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요란스럽 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도정의 바뀐 점이 가장 잘 드러나기도 한다. 즉 개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헌신, 성실, 개방, 창의성이 드러나서 다른 시도와 비교 하면 곧바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평가하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직의 성과가 서서히 시간을 갖고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

전략

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추진상황

-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개 세부과제)
 - 착수 (1):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착수, 무상교육과 종일 돌봄 지원은 교육청 자체 시행), ② 평생교육·사회교육
-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2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② 청년 터 조성(공약)
-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개 세부과제)
 - 완료 (1): ⑦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 실행 (4): ① 도지사 직속 경남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④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0개소), ⑤ 보육료 차액 지원, ⑥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긴급육아가사도우미 파견
 - 착수 (2): ② 경남 mampan원스톱보육센터 설치, ③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 실행 (2): ①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④ 경남형 치매관리제, 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⑥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⑦ 찾아가는 검진버스, ⑧ 경남 365 안심병동
 - 착수 (1): ②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 용역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준비 (1):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활동 연기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2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2)				2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7)			2	4	1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증진 (4)		1	1	2	

점검의견

-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초중고 무상 급식 전면 실시 및 급식단가 500원 인상 완료 긍정적
 - 시군 친환경쌀 구입 지원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 확대 필요
 - 남해와 밀양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고성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대로 추진 필요
 - 평생교육 진흥원 재단법인화를 위한 용역 실시 중, 결과 반영한 추진 필요

-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개최가 연 1~2회 개최에 불과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군 청년 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경남도의 청년정책 개발과 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시군의 청년터 조성사업은 도내 청년이 많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맘편한 원스톱센터’ 의령군에 개원 준비 긍정 평가
 - ‘공공산후조리원’ 동부권(밀양)에 추진 중, 긍정 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차액 지원 예산 확보,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 확대 및 긴급육아, 공공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도지사 직속 경남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는 점은 미흡
-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의서비스 증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창원시, 김해시와 긴밀 협조 필요
 - 경상남도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성과
 - 권역통합의료벨트 구성요소 작업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경남형 치매관리모델 개발 완료, 실행계획 수립 등 정상 추진되고 있음

총평 및 추가과제

- 총평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문은 상당히 진전, 청년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시대적 과제인 출산·보육 지원에 그간의 보육인프라 확대 구축 차원을 넘어서 저출생 등 현실 상황의 변화와 도농 지역 편차 고려한 종합 보육정책 수립 요망
- 신규 제안 과제
 - 경남지역 우수 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도 차원의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방안 강구
 -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를 위해 구민회관, 재래시장, 교회 건물 등 여러 유휴 공간 활용 방안 강구, ‘가족품앗이’ 등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경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조례’ 제정 고려 필요
 - 청년 박람회 혹은 청년 대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강구
 - 시군 청년터 조성사업은 생활SOC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도에서 청년터(청년복합센터-북카페, 회의실, 상담실, 열람실, 문화 공간 등)에 대한 몇 가지 모델을 개발하여 시군과 협의·유치 방안 강구
 -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시 해당 지자체간 갈등 방지 노력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추진상황

- 23. 노동자 권익보호 (8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 실행 (3):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⑥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⑧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 착수 (1): ⑦ 생활임금
 - 준비 (3): ②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③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조성, ④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특보, 경상남도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 등), ② 젠더폭력방지 기반 구축 (With You 지킴이단 구성, 상담소 상담원 1인 추가 배치 등)
- 25. 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 (2개 세부과제)
 - 실행(1):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준비(1): ②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임플란트·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실행, ③ 새로운 복지 전달체계, 찾아가는 복지센터 실행, ④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실행
 - 착수(1): ② 어르신센터 설치 착수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3. 노동자 권익보호 (8)		2	1	3	2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2)				2	
25. 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기반 강화 (2)		1		1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4)			1	3	

점검의견

- 23. 노동자 권익보호
 - 민노총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및 일반기업 위원 위촉 애로에 추가 노력 필요

- 이주노동자 쉼터 조성에 대한 기초지자체 지원 확대
- 돌봄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지원 추경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 필요
-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필요
-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여성특보 임명,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위한 용역 진행, (가)성평등재단 설립 추진 긍정적
 -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와 폐지된 양성평등기금 부활 위한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준비 중인 것 높게 평가
 - 여성상담소 인력 추가 배치 및 근무환경 개선위한 협의 진행도 긍정적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에 도지사 강한 의지 필요
-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시행 긍정 평가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정책개발 미흡
-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및 추진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성과
 - 경남 양성정책 방향은 맞으나 추진 속도는 미흡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절실
- 신규 제안 과제
 - 서울시 젠더자문관,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같은 젠더 전문가 확충 필요
 -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은 현 실정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 개편을 통한 재단 형태의 설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차후 여성플라자 형태로 확장 필요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추진상황

-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개 세부과제)
 - 실행 (3): ①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 운영: 동남권 대기 오염원조사 및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역학 조사 진행 중, ②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③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
- 28. 낙동강 수질 개선 (1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낙동강 수질 개선: 점 오염원 저감사업 계획대로 추진 중,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은 성과 미흡
-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개 세부과제)
 - 실행 (1): ①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②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3)				3	
28. 낙동강 수질 개선 (1)				1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2)				2	

점검의견

-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 대폭적인 예산반영으로 대기오염측정소 조기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 실질 운영 필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 필요
 - 미세먼지 대책자문단의 부울경 행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충전소 등 인프라 조기 확대 구축 필요
- 28. 낙동강 수질 개선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부, 6개 시·도 협력: 통합물관리에 따른 경남도의 조직 개편 (1담당 신설)으로는 행정적 대처 미흡(부산시의 경우 1국 신설)
 - 녹조 발생 시 상수원수 및 수돗물 조류독소 평가 계획 미비

-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 천연가스 및 수소버스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전환 정책 실행 가속
- 소관부서를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에너지산업과로 변경 필요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미세먼지 예측 등 연구 노력, 측정망 조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는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도정 의지의 적극성 평가지표가 될 수 있음. 환경부 용역결과를 반영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신규 제안 과제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 미세먼지 예측 및 예보,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기후대기과 조직 확대
- 중앙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맞추어 경남도 물관리 조직 개편: 수자원관리과 신설
- 녹조 발생 시 상수원수 및 수돗물 조류독소 평가단 발족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추진상황

-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7개 세부과제)
 - 실행 (4): 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운영,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중, ④ 경남정신 확립위한 선비문화 연구 수행, ⑤ 경남예술인 그라민금고 운영, ⑦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제정, 예술창작센터 및 음악창작소 개소 준비 중
 - 착수 (3): ② 경남도립예술단 장르 선정을 위한 지역 예술인, 전문가 의견 수렴 중, ③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설명회·컨설팅 추진, ⑥ 예술인복지조례 제정,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준비 중
-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개 세부과제)
 - 완료 (1): ①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지원
 - 실행 (2): 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 및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중, ④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및 체육인프라 개선('19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총 14개소 선정) 추진
 - 착수 (1): ③ '19년 장애인 체육관 4개소, 이동약자 체육편의시설 1개소 체육기금사업 공모 확정
-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2개 세부과제)
 - 실행 (2): ①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남해안 도보여행길 안내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중 ② 경남문화관광진흥재단 7월 설립 추진 중, 열린관광지 확대 조성(5개소→10개소), 민간 중심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두레 사업 확대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7)			3	4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4)			1	2	1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2)				2	

점검의견

-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획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후 분리 추진
 - 경남도립예술단 설립 관련 추가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 확보 노력 요망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년 뒤 이전시 경남 유치 노력

● 31. 생활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에 시군 참여가 저조하므로 지속 홍보 및 도비 적극 반영 필요
-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체육동호회 지원사업 확대 필요

●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 경남문화관광진흥재단 설립 전 관계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경남관광협회 등과 경남관광 협력체계 구축 논의 필요
- 현재 한시적 운영중인 경남관광 워킹그룹의 상시화 검토 필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
- 설립 준비중인 경남문화관광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신규 제안 과제

- 경남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가칭)경남문화예술도시재생지원단’ 설립
- 경남 ‘스포츠전지훈련 지원센터’ 설립 및 도내 프로구단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 경남 체육의 역사 전시, 시민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남체육회관 건립 필요
- 경남 내수면에 일반인 이용가능 카누, 카약 인공급류 국가대표 경기장 조성 검토 필요
- 경남문화관광진흥재단 조직 확대 및 타 시도 조직 기능 추가 연구
 - 재단내 경남형 산업관광팀, 복지관광팀 필요, 타 시도 사례 및 전문가 조사 추가
- 경남의 숙박, 음식점, 관광지 중 시설·서비스가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경남관광품질인증제’ 및 경남 방문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품질보증제’ 도입
- 경남지역 축제 컨설팅단 운영 필요, 축제에 성인지 관점 도입 시급
- 경남 주요 관광지에 ‘관광경찰’ 도입 필요
- 창원스마트산단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창원컨벤션센터(CECO)을 최첨단컨벤션센터로 조성
-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실내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센터’ + ‘해저공원’ 건립 고려 필요
-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항노화주식회사’를 청산하고 ‘웰니스관광센터’ 설립
- 경남 가야문화복원 및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수립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추진상황

-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실행 (1): ① 공공건축가(총괄건축가 포함 26명)제도와 도시재생 도 시범사업 2개소 시작, 경남 도시재생센터 활동 및 주민주도 마중물 사업 시작, 정부공모 년평균 6-7개소 목표
- 34. 유니버설 디자인도시 구현:
 - 실행 (1): ② 저상버스 보급 확대시행 중(연평균 65대)
 - 착수 (1): 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통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공모 중
- 35.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 실행 (2): ② 100원택시 21개 마을, ③ 남해안고속철 96%공정률, 진주-광양 전철 실시 설계 중
 - 착수 (1): ① 광역교통기구 설립 난항, 창원-김해간 광역환승 할인제 우선시범시행(2019)
-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실행 (3): ① 안전감시단, CCTV, 비상벨, ③ 화재방재시스템(조사,훈련,개선) 강화 중, ④ 학교내진보강 및 스프링클러 지원
 - 착수 (1): ② 스마트지진방재 종합계획 용역중, 계측기 및 공공시설 지진보강 진행중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1)				1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2)			1	1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3)			1	2	
36.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대응 체계 강화 (4)			1	3	

점검의견

-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공공건축가 자문역할에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 필요
 - 공공문화시설 공사비 5~10%를 향후 5-10년간 공공건축 운영 문화프로그램에 할애하는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개발경비 할당제' 검토 요
 - 공공건축 담장허물기 및 로비 및 외부와 옥상공간 시민개방 추진 요
 - 도시재생 하드웨어 평가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개설 요

● 34. 수요자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 부울경 협의체 필요,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 필요
- 서부경남 고속도로, 고속화철도 연계하는 교통체계 준비.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청사진 필요(산청-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 창원-함안-김해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기존의 김해-창원, 김해-부산, 부산-양산은 확충. 거제-부산간 광역교통은 문제해결 중심으로)
- 부전-마산 전철 운행주기 조정 등 사용자 편의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각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 실현에 대한 도의 협조 및 광역간 노선 조정 필요

●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재난 대응책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미흡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확보 및 IoT, ICT 기술 활용으로 실시간 재난 관련 서비스, 안전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하드웨어 지양 소프트웨어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편리함, 안전함을 담보하며 무난 진행중

● 신규 제안 과제

- 총체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조성 컨트롤타워로서 국립 남부 건축·디자인센터 구축 필요
-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품질검수단 서비스 필요
-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유치 및 지원 필요
- 스마트시티 유치 자문단 구성(창원 해양신도시, 진주 혁신도시와 연계. 도가 주도)
-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방
- 고속화철도연계 교통체계와 지자체간 광역교통망, 전라남도 연계고속철 청사진과 전담부서 요
- 부전-진주간 준고속화 철도를 전라남도와 연계 남해안 '고속철'로 검토

- 목표 3은 도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제도화, 다른 행정기관의 협치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전략이다.
- 행정혁신추진단을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성과가 나기에는 이르지만, 추진할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도 사회혁신과 행정혁신 분야의 경력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 7기의 도정 조직 문화의 혁신이 기대된다.

전 략

1.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만드는 사회혁신

추진상황

-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공약, 1개 세부과제)
 - 준비(1): ①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조례 개정)
-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3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주민참여예산제(공약), ② 도민참여 활성화 협치(도정배심원제, 도정자문위원회, 읍면동장 도민 공모제 시범시행, 국민소송제 도입)
 - 착수(1): ③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3개 세부 과제)
 - 실행(2): ① 뉴미디어 도민 참여 확대, ③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 준비(1): ② 도민과 함께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1)		1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3)			1	2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3)		1		2	

점검의견

-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지연으로 경남 주민투표조례, 경남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조례 개정이 어려운 상황
 - 관계 법령의 개정 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최대한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고, 도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가능토록 조례 개정(안) 준비 필요
-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는 각종 전문가 자문, 연구회, 토론회, 워크숍, 예산학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의 일반회계 중 참여예산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정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도정과제 추진 시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제안 사항의 피드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도정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및 운영 예산 확대)
 - 읍·면·동장의 도민 공모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음에 따라 도가 적

- 극 지원하되 도 차원의 공모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감사위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장

● 39. 도민정책 참여 플랫폼 마련

- 홍보, 정책개발,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유튜브, SNS 등 플랫폼의 운용 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
-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은 정원과 수목원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품질검수단 확대와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 정책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전반적으로 전략 1의 참여 민주주의 확대와 사회혁신을 과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음
- 관계 법령의 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읍·면·동장 도민 공모 시행은 기초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도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경남도 공무원 중 개방형으로 도민 공모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 도민 참여를 통한 홍보와 정책 전파가 될 수 있는 쌍방향 뉴미디어 활용 방안 강구
- 서부청사 행복화원조성의 경우,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부경남의 상징적인 정원이 될 수 있는 대책 강구

● 신규 제안 과제

- 대의민주주의 보완 및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조례인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가칭) 제정 추진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의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경남발전연구원 혹은 전문가 용역 검토)
 -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함께 주민참여정책제를 도입하여 도민 주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 추진 강구
 - 서기관·사무관 직급 중 도 차원의 도민 공모 시행 가능 직책 신설 강구
-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 방통위 미디어센터(후보지: 창원시) 연계 '경남 정책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미디어 확산 센터 조성
 - 서부청사 행복화원의 경우, 서부경남의 상징적 정원 혹은 남명학을 연계한 개념 정원 검토(예산 추가 확보 포함)
 - 품질검수단 확대 전후 하자분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도민만족도 제고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추진상황

-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1개 과제)
 - 실행(1): ①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41.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2개 세부과제)
 - 실행(2): ①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공약: 교육행정협의회 기능 실질화), ② 중앙정부 소속 기관과 협력
-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1개 과제)
 - 실행(1): ①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1)				1	
41.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2)				2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1)				1	

점검의견

-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및 소통 채널 마련 필요
- 41.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은 성공적이나, 도가 초·중·고 및 고등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이 부족함
-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필요
 - 동남권, 남해안권 등의 지방정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초지방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미약함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도의회, 교육청,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방정부와의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협치를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 방안 마련 부족
- 각 기관별 구체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협치를 위한 다양한 채널 가동 필요

● 신규 제안 과제

- 도의회, 교육청,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방정부 등과 공통 의제의 이해와 다양한 접근을 위한 전문가 그룹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검토
-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에서 공공건물 담장 허물기, 로비 및 외부와 옥상공간 시민개방 추진 검토
- 학교폭력 대처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경찰청,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체계 구축하고, 생활SOC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및 청년 복합 센터 설립을 강구
- 도내 기초지방정부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도내 시외버스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부울경 광역교통청,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적극 추진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추진상황

-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세부 과제 1개)
 - 실행 (1) : 세부 과제 내용에서 ‘공공자원 공유(청사 문화 갤러리, 365문화 프로젝트, 도청 공간 개방)’은 시행 중이며 ‘도민 중심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알기 쉬운 재정 정보 공개’ 준비 중임
-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세부 과제 4개)
 - 준비(1) : ① ‘빅데이터를 이용 민원·복지 분석 및 활용’은 행안부의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공모에 선정되었고 본격적인 활용을 위해 분석 과제 발굴과 데이터 축적 중임.
 - 실행(2) : ②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는 일부 완료 일부 진행 중임, ③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맞춤형 과제 발굴 진행 중임
 - 완료(1) : ④ ‘서부청사 민원해결’은 종합민원실(행정경제, 문화복지, 국토해양 등 93종) 운영
-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세부 과제 2)
 - 실행(2) : ① 적소적재 인사혁신은 실국장 책임인사, 과장 공모 등을 시행 중임, ② ‘성과 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운영 패러다임 전환’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운영 중임
-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세부 과제 1)
 - 실행 (1) : 내용에서 유연근무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인사 고충, 민원 청취를 강화하고 있음

과제별 추진 단계	검토	준비	착수	실행	완료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1)				1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4)		1		2	1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2)				2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1)				1	

점검의견

- 43. 정보공개, 자원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정보공개와 자원공유는 도민 생활 편익증진과 직결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공정보는 개방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철학이 필요함
 -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하여 검사, 조사 시설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함

-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 빅데이터 형성을 위하여 기존의 데이터를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군, 유관기관, 대학들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에서 이용자 만족도, 불편함 피드백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여부 점검 필요함
 -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에서는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명회, 공청회, 만족도 조사 등이 전혀 없으므로 보완 필요함
 - 서부경남 민원센터에 경남1번가 분소의 역할,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45.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 인사운영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들 간의 소통, 협치의 조직문화 강화가 필요함
 - 성과 관리, 지표에서는 공직 사회의 반응과 피드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통과 협치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렬별 원탁 토론(퍼실리테이터)의 실시 권장
-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의 양성 평등에 대한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6급 이하 유연 근무제 활성화 하는 문화가 필요함
 - 지방직 공무원들의 해외 유학 및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지원 검토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총평
 -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어지는 행정혁신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깊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그 과제를 왜 하는가? 방향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김경수 도정은 도민과 소통, 거버넌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혁신, 행정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 ‘과제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청회, 토론회, 인식 조사 등 소통이 거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소통과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신규 제안 과제
 -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경남 본청에서 공보관실(홍보, 전달), 사회혁신단의 경남1번가(도민들의 정책 제안 받는 역할), 민원실(도민들의 각종 민원 접수), 빅데이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기능, 역할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함. 정보의 생성, 분석, 전달,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임

제3부

6대 중점과제 점검

6대 중점과제

-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은 경남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40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기획과 집행체계 구축은 장기간에 걸쳐 숙성이 필요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데에는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들은 자신이 맡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이를 통합, 조정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기에 그렇다. 이를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사회적 가치 기반의 시스템 구축, 서부경남 KTX와 서부경남 발전 동력 확보, R&D체계, 먹거리 순환, 저출산대응과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은 핵심사업으로 삼아 도지사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 각각의 과제들 모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준비단계로 파악되며, 성과를 도지사의 임기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점 과제

- ①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②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③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 ④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 ⑥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과제추진 상황

- '19년 신규 사업 국비 2,696억 원 확보
- '20년 신규사업 발굴 (4월말 기준) : 107건, 3,075억 원 목표
 - 신규사업의 '20년 국비반영을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국회 방문 건의 등)
 - 국비확보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테마 선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 경제혁신추진위원장 주재 영상회의 개최 (국비 신규사업 컨설팅)
- 2019년 신사업 발굴·기획 : (접수) 50건, (기획과제 선정) 7건
-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을 완료 ('18.8.3.)하고, 경제 부지사 제도를 신설 ('18.8.2.)하여 도내 침체된 경제 혁신 추진을 선도할 추진 체계 마련 ('19.1.3.)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신규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3개 분과활동을 장려하여 현장 중심의 주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 추진 중
-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항공국가산단 조성, 항공정비 산단 조성, 무인기 종합 타운 조성, 및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 시스템·우주부품 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다양한 사업 동시 진행 중
 - 국비가 지원되는 LNG병커링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과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사업과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 동시 진행 중
 -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하여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
 -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개발 지원 사업과 스마트공장 협동로봇 신뢰성 평가 장비구축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제조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 센터 구축 등을 통하여 나노 부품 산업 육성 지원 및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 중
- G-MBP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응 중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도 예산의 투입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참여 기업의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 보안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성과 관리 추진

- 도 예산의 추가 투입을 통하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로 도입 기업 수 증가
- 특별출연 금융기관 협약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스마트팩토리 론 등)
- 사전·사후 컨설팅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스마트공장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 추진 체계 일원화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전환 사업 추진
- 스마트 산업 단지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결성 및 예산 확보 진행 중
 - '19.03.에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선정 및 경남형 미래형 산단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진행 중
-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및 스마트 산단 사업 선정으로 필요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직자 교육 및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 중
 - 2022년까지 경남형 스마트공장 4,400명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 추진 중
-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경남 4개 지역 (양산, 김해, 창원, 진주)을 신청한 상태로써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 센터 유치의 경우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 진행 중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자부품연구원의 지역 분원 및 SK(주)의 스마트공장 연구소와 자회사인 (주)에스엠코어의 본사를 창원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 중
 - 연료전지 분야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과 분원 유치를 협의 중
-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사업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 진행 중

■ 과제점검 의견

- 도지사 임기 내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좀 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기획 적극 추진 및 지역 주도 R&D 생태계 전환 필요
 - 지역이 주도하는 R&D 사업 생태계 전환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상시 협업 체계 마련 및 필요 ⇒ 국가 R&D 예산을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정책 추진
 - 지역 주도형 R&D 기획 및 관리 능력 확보를 위하여 KISTEP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기관 설립을 추진하나 여건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기존 기관 (예 : 경남발전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면서 별도 분리 추진

-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국책연구소의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별도의 쿼터 지정 필요
 -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발굴 유도 및 국책연구소의 지역 주도 중형 이상 R&D예산 독점 방지
 - 지역 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 기여도에 대응되는 협업지수를 마련하여 협업지수에 따라 쿼터 배정 필요 ⇒ 지역 기업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 기계 중심 산업에서 ICT융합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바이오 (항노화, 식품, 신약 등), 해양산업 및 관광 분야, 플라잉 개인 수송 기기, 양자 컴퓨팅 등의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육성 정책 추진 필요
 -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신규 산업의 발굴 및 확대에도 일정 비율 이상 쿼터 할당 필요
 - 중앙정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방향에 순응하면서도 선도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독려를 통하여 주도권 획득 필요
- 도내 혁신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의 국내·외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 장려 필요
 - 국가 R&D 및 비R&D 예산 집행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내 혁신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이 외부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사용 적극 지원 및 장려 필요
- 기존 기계 중심의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非기계 산업 중심의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 외연 확대 필요
 - 제조서비스 산업 및 협업형 로봇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남형 고급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확대 필요
 - 농업, 해양, 바이오, 관광, ICT융합 등의 다양한 산업 전문가 상시 협업 체계 마련 및 일정 비율 이상의 기획 연구 예산 지원 필요 ⇒ 타 局과의 협업 체계 마련 필요
-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의 경우 도지사 임기 시작 전부터 시작 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여 경남이 선도하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 필요
-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부산 및 울산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One 팀으로써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도가 주도하는 사업의 기획, 추진, 및 성과 분석을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연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 필요
 - ※ 타 지역 대학을 참여시키더라도 지역 대학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및 기계연구원 등에 경남을 위해 Co-Work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 지원 필요
 - ※ 경남도 조선해양관련 공무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 검토 필요
- 스마트공장 공급 사업의 경우, 도지사 부임 후에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발전 필요
 - 초기 보급 기업 수에 대한 홍보로 인하여 지역 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조언 및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초기 부작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2019년 및 2020년 예산 확보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석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경남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써 전환 필요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 센터 유치의 경우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 진행 중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자부품연구원의 지역 분원 및 SK(주)의 스마트공장 연구소와 자회사인 (주)에스엠코어의 본사를 창원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 중
 - 연료전지 분야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과 분원 유치를 협의 중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지역 중심의 R&D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지역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획 및 관리 전담기관 설립 필요
 - R&D 전담 조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주도로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국책 연구소, 대학 및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참여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필요, 장기적으로는 BISTEP과 같은 R&D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설립 필요
- 지역제조업 혁신 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가치 “경남 신성장산업 전략 기획단” 신설 제안
 - 산하에 CoBot(Collaborating Robot)전략 기획단(CoBotSW 플랫폼과 CoBot H/W 관련 기술을 동시에 개발 관련 다부처 예타사업 기획 등),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전략 기획단, 미래형 전기추진 항공기 기술개발(기계식에서 전기식 전환) 기획단 등인간과 협업하는 CoBot (Collaborating Robot)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제조업 혁신 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과 시너지 효과 및 극대화 및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과제 추진 상황

- 도민청원제도(도민참여센터 포함)
 - 2019년 1월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할 때 도민참여센터를 포함하여 인수위의 경남1번가를 계속 운영 중임
 - 2019년 9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한 도민 참여 플랫폼으로 출범 예정
-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대타협 실현(추진상황 II-2-23-① 참조)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위원 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여 4월에 위원회 개최함
 - 위원회 안에 분과를 4개(고용심의, 산업안전, 노동환경개선, 산업혁신)로 확대함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함
 - 예산은 2018년, 2019년 2년 확보한 예산 1억7천4백만 원 모두 집행 완료함
 - 어려움 ;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참여 보류와 개별기업 일반노조 협의회 참여 고사
-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추진상황 III-3-45-② 참조)
 - 정책기획관, 도정혁신추진단, 경남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 8회를 통해 기존 성과평가와 사회적 가치 기반 성과관리(도 BSC)의 분리 운영 논의함
 - 사회적 가치 기반 성과관리체계 혁신 TF 구성(3월)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도 차원의 전략지도 설계 등 진행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지표 설정 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 위주의 지표 설정을 강조함으로써 총 610개 성과지표 중 370개 지표에 사회적 가치 반영
- 사회혁신 추진 상황
 - 사회혁신추진위원회 구성 완료하였고 2회의 위원회 개최
 - 사회혁신가활동가 대학을 통해 109명의 시민 혁신 활동가 배출
 -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개소식
 - 2019년 9월 23~25일 경남혁신포럼을 준비하면서 민간의 경남 사회혁신활동가 네트워크와 협치를 진행하고 있음

과제 점검 의견

- 도민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함

- 민원실, 정책 과제, 도민 청원 그리고 도 정책을 알리는 공보 역할 등의 통합 필요
-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노동계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 자발적 참여, 격려 등에 대한 사업 발굴 필요
- 사회혁신단이 사회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도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각 위원회 참여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와 소통이 필요함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경남형 사회 안전망 구축 - 노사정민협의회 구성의 전단계로 노사민이 협력하는 과제
 - 일자리안정공제 ;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숙련 노동자, 전문 기술자들이 오래 근무하기 위해 공제를 함. 노동자, 사업주, 자치단체(광역과 기초)가 일정 금액 5년 적립하여 주는 공제로 현재 강원도가 실시하고 있음. 노동자는 이 기간(5년) 동안 직장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공제임. 우리 경남에 맞게 일자리 안정 공제를 조례로 시행하는 과제임.
 - 노동자들이 자조 기금을 만들어 상호부조, 소액대출을 할 때 노동자 상급단체와 함께 자치단체가 매칭으로 기금을 빌려 주거나 투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

서부경남 KTX신성장 경제권 구축

과제추진 상황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에 반영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결정('19.1.29.)
 - 기획재정부 주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19. 9. 기한)
 -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 추진 중('19.3.~ 2020.1 기한)
- 남부내륙 철도 사업계획 변경(안)
 -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 및 항공.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 이동 증가 대비, 김천 ~ 진주 간 복선 건설 추진
 - ⇒ 복선화 건설(안) 도지사 보고 후 중앙부처(기재부,국토부,KDI 등)에 공식 건의('19. 5. 21. 공문 발송)
 -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 '19년 예산 확보, 설계공모 발주 중('19. 5.)
- 지역혁신 클러스터 관련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 지원
 -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18년 18%, 매년 3% 증가, '22년부터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달성 지원
 - '19. 4.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67개 기관 3,000명 이상 참가)
-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 산업연구원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 중('18. 3. ~ '19. 6.)
 - '19. 6. 중 최종보고회(전문가 자문)를 통해 사업규모 및 예산액 조정 등을 거쳐 '19.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
-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조성 용역 추진
 - 용역 수행 중으로 '19. 6. 4.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 용역 완료 및 정부 사업건의('19. 10. ~)
-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 '19. 5. 3.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센터 착공
-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 추진
 - '2019 나노피아전시회 개최 예정 : '19. 11. 7. ~ 8. 창원 CECO

- 향노화 산업단지, 휴양체험지구 등 클러스터 조기 구축
 - 산청 한방향노화산업단지 조성('19. 12.한, 현재 공사시행 55%)
 - 함양 향노화특화농공단지 조성('20. 12.한, 현재 보상 90%)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19. 12.한, 전체 공정을 58%)
-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20.9.25. ~ 10.14.)
 - '19. 4. 2. 조직위원회 출범 및 성공기원 행사 개최
 - 엑스포 대행사 선정 및 티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19. 6 ~)
 - 엑스포 업무협약 체결('19. 6. ~)

과제점검 의견

- 남부내륙 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조기 이행 및 2020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500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부처 방문과 요청 노력이 필요함
- 남부내륙철도 경유 예상 지자체간 역사 신설 관련 갈등 조정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즉 지역내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노선 조정 요구 및 정착지 역사, 종착지 역 등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론 파악, 용역(경남 발전 그랜드비전 수립, 2019년 12월 완료 예정)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조정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년 예산 12,814백만 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처 방문과 요청 노력이 필요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2019년 채용목표 21% 달성을 위해 중간 점검(예를 들면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성과와 문제점 등)과 이행 촉구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 반영이 필요함
-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관련 지자체의 인식 부족(혁신도시 시즌 2의 핵심 사안은 특화 발전분야로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임에도 현재는 정주여건 개선, 배후도시와 연계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음)이나 관련 지자체(진주시)의 소극적 태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경남혁신도시 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도지사과 지자체 장관 정례회의 활성화, 행정혁신과제와 협의 등)

-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의 소요 예산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추진 속도가 더디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및 부처 간 사전 공감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서부권 개발국 등) 차원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KTX신성장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점과제는 경남의 주력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경제협력 대비, 호남 동부권과 협력을 통한 경제권 확장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의의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전남 동부권과 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경상남도의 로드맵 작성 필요
- 혁신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통상부 자원 800억원을 확보하여 R&D 및 비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 ⇒ 기 확보된 산업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 마련 및 예산 배정이 없는 주무부처 (국토부) 예산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공약 이외에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과제(친환경·고내구성 세라믹 소재부품을 경남주력산업으로 육성, 지역전략항노화 산업 육성)의 경우 경상남도의 기존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속사업으로 선정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 방식 재편 등이 필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혁신도시 시즌 2 관련 예산은 국토부 소관이기는 하나 관련 예산 책정은 없는 상태이므로 혁신도시 개발이익공유제를 위한 ‘서부경남 신성장상생기금’ 조성하여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비로 활용함이 바람직
 - 경상남도·진주·사천·고성·관련 기업 공동펀딩(국가 재정 매칭)으로 항공산업 육성 지원
 - 진주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2016년 말 712억 원) 활용
 - 제조업과 농업, 항공대기업과 협력업체, 진주와 사천, 노인과 청년 상생자금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서부경남)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상생 도모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과제추진 상황

-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경남 4개 지역 (양산, 김해, 창원, 진주)을 신청한 상태로써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
- R&D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부산 및 울산 지역의 불동의로 인하여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남권 수소 산업 육성 위한 협의체 및 동남권 기술거래 박람회 등에 대하여 부산 및 울산지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 ⇒ 3개 광역자치단체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상대로 인식 하는 것으로 판단
- 지역주도 R&D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혁신성장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기획을 연구 추진 중
 - 제조혁신 성장모델 및 플랫폼 발굴과 병행하여 R&D전략 및 지역 중심의 R&D체계 개편 방안 연구 중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 센터 유치의 경우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유치 진행 중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자부품연구원의 지역 분원 및 SK(주)의 스마트공장 연구소와 자회사인 (주)에스엠코어의 본사를 창원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의 중
 - 연료전지 분야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과 분원 유치를 협의 중
-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사업은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 진행 중
-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은 최근 전통 제조업과 ICT융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 타당성에 대한 내외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소재부품 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예타 사업을 '19년 1분기에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임기 내 예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중
- 중소기업R&D사업화 지원센터는 '18년 하반기에 개소,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R&D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과제점검 의견

-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최소 1개 및 최대 모든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 新성장 동력 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R&D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부산과 울산 지역과 비슷한 산업 구조로 인하여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므로 지역 중심의 R&D 체계 개편과 연계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도 R&D 체계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를 진행한 후에 광역 지자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 필요
-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분원 및 대기업 R&D 센터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 내에 단기 유치가 아닌 지역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 이후의 자립화 및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및 추진 필요
 - 지역 대학과 협업하는 인력양성을 통하여 지역 인재가 핵심 인재로 잡을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제도를 마련하고 경남도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 - 주거비 등 보조
- 재료연구소의 조기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을 위하여 대 국회 홍보 추진 및 지역 여론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임기 내 승격될 수 있도록 로드맵 제시 필요
-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치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설립에 대한 찬성 의견 조성 및 지역 여론 조성 필요
 - 단, 당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정보산업진흥본부의 자체 기획 능력 강화를 위한 관련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필요
-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남 단독이 아닌 부울경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거나 충남 및 대구 지역과의 협업 체계 마련을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
-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의 경우 고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마케팅 사업)은 기업지원단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통합 관리 필요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지역 중심의 R&D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지역 新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획 및 관리 전담기관 설립 필요
 - R&D 전담 조직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 주도로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국책 연구소, 대학 및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참여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 필요, 장기적으로는 BISTEP과 같은 R&D 사업을 기획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설립 필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과제추진 상황

- 먹거리위원회 구성(4개 분과, 40명) 및 출범. 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경남(김해)-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확정, 서울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 구축 간담회 개최(서울시청),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상정(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공청회 개최,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먹거리위원회 분과별 회의 개최(13회)

점검 의견

- 현재 진행 중인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이후, 먹거리위원회의 자발적 의제 설정과 민관 협치 기구의 위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설정이 필요함
 - 먹거리위원회 위상과 분과별 세부 역할, 기획조정위원회 위상 등을 점검하여 단순 자문 역할과 분리하여 실태조사 참여와 평가,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시군별 수요와 여건 분석, 경남 급식 전반(학교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분석 자료, 경남 내 친환경 생산자 조직의 현황과 과제 등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실행계획 마련 요
 - 경남발전연구원 신규 연구과제 설정, 현장과 행정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 분석 요
- 지역 푸드플랜을 위한 용역사업이 경남도의 실정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
 - 4개 분과운영과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으나 생산자들의 조직체계와 현행 판로, 기존 시군별로 식재료 공급방법 등에 대한 실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
- 먹거리위원회의 비중감이 다소 미약하며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각자의 업무분담 등이 명확하지 못함

- 지역먹거리는 농산물외 축, 수, 가공품까지 포함하므로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서가 산재되어 업무총괄에 있어 한계가 드러남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연차별 이행계획 내에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추진 제안. 현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중심으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먹거리 정책을 펴는데 조례를 근거로 이행 계획 수립할 필요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도가 '먹거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으로 구성함, 서울시의 경우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거버넌스 운영의 세부 내용을 모두 조례에 담고 있으며 논의 주제를 명시하고 있음
- 먹거리 정책과 관련한 경상남도과 교육청, 먹거리위원회의 업무 협력 방식의 근본적 전환 등을 검토, 먹거리담당팀의 신설 등으로 중점과제의 총괄적 점검과 이행,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
- 부-울-경 먹거리 정책의 공동협약을 위한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 간 공동협약식 및 공동선포식 등을 통해 푸드플랜을 비롯 먹거리 공공성 의제의 폭넓은 공론화 및 홍보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임

중점과제 6

저출생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과제추진 상황

- 2019년 5월 말 현재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구성 미완료
-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4분기 설치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음
- 「거점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경남 진료군 분석 및 건립후보지역 검토 연구」연구 진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 : 연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 실행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제시 예정
- ‘공공보건의료확충자문단’ 구성 및 운영 : 4개 분과 32명으로 구성, 두 차례 회의 개최
-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연구 용역 재공고 (2019.6.3. 마감) : 1차 유찰(2019.5.22.)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진주 경상대병원에 위탁(2팀 8명) 후 근무지는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으로 결정
 - 현재 직원 채용 중(2019.6.7. 마감)

과제점검 의견

-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 따른 경상남도 중진료권 설정 변경
 -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 공공병원도 없고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경우 설립 검토 가능
 - 중진료권당초 8개에서 5개로 조정 : 진주 진료권과 사천·남해 진료권 통합 등
 - 당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서 민간의료기관 활용 검토 후 공공병원 설립으로 내부 의견 조율 중
 - 「거점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경남 진료군 분석 및 건립후보지역 검토 연구」결과 최종보고 전후 입장 확정 예상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구성요소들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총평 및 신규 제안 과제

-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아닌 다른 대안을 택할 경우 지역사회 저항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안 개발 필요성 증가

제4부

과제추진 점검

1 과제별 전담부서 및 협력부서 운영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산업혁신과	예산담당관 일자리정책과
	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3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항만물류과	
	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	
	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신산업연구과	전략산업과 서부정책과 항노화산업과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			
	7	청년일자리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9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복지정책과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소상공인정책과	
	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경제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과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농식품유통과	
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친환경농업과		
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실현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해양수산과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정책과	
	20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사회혁신추진단	건축주택과
	21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22	지역 공공의료보건의료서비스 증진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목표	전략	도정과제	전담부서	협력부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23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정책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인사과 예산담당관
	24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정책관	
	2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지과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복지정책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보건행정과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27	최적의 대기질 관리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28	낙동강 수질개선	수질관리과	
	29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30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과	
	31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체육지원과	
	32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관광진흥과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33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도시계획과	
	3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35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확충	교통정책과	신공항추진단	
36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정책과	교육정책과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37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자치행정과	
	38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사회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감사관
	39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공보관	건축주택과 서부정책과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40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41	통합교육행정체계 구축	교육정책과	
	42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외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43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인사과	
44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건설지원과 서부민원과	
45	적소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인사과	정책기획관	
46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인사과		

중점과제명		전담부서	협력부서
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항노화산업과 서부정책과
2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회혁신추진단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 인사과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4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신산업연구과	산업혁신과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농식품유통과	
6	저출생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보건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

2 투자계획

목표	전략	사업비 계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314,020	15,040	22,730	27,422	24,746	224,082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전략1. 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208,572	2,782	4,498	4,259	5,083	191,950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9,829	1,157	1,679	1,932	2,233	2,828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3,388	402	852	785	131	1,218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3,350	15	403	682	1,058	1,19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19,233	1,913	3,506	4,115	4,609	5,090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3,524	306	480	699	740	1,299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26,613	1,069	3,134	7,509	6,037	8,864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 생태계 조성	19,098	2,818	2,773	2,694	2,628	8,185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20,200	4,570	5,352	4,704	2,189	3,385
함께 여는 혁신 도정	전략1.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151	0.2	29	29	31	62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	-	-	-	-	-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62	8	24	14	7	9

3 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조직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조례

1. 도정 4개년 계획 추진 조직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실시

부서(13)

조직명	추진방안	조직개편	비고
경제혁신추진단 (일자리사업본부)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7.16. 산업혁신과)	
	일자리사업본부 설치 검토	일자리위원회로 구성 검토	
노동전담부서	다양한 노동정책 추진을 위해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	노동정책과 신설	
사회혁신추진단	사회혁신추진위원회 신설	사회혁신추진단 신설 - 도민참여센터담당 신설 ※ 2019년 위원회 신설 예정	
	사회혁신기획관 신설		
	도민참여센터 운영		
행정혁신추진단	도정혁신 자문기구 및 행정혁신담당관 신설	도정혁신추진단 신설 - 도정혁신보좌관 임명(10.15.)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종합적 기획 및 정책수립 부서 필요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담당 신설	
저출생보육기구	도시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과 단위 전담부서 신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신설 ※ 2019년 위원회 신설 예정	
주민참여예산팀	예산2담당 조직 확대 검토	사회혁신추진단 내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으로 부서 및 명칭 변경 이관 - 직원 증원 3명→5명	
공공의료체계 확충 전담팀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T/F팀 신설 필요	보건행정과 공공의료정책담당 신설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조직개편	수자원 정책기능을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수자원관리담당으로 이관	
지역푸드플랜 전담팀	농산물유통과 내 담당 신설	농식품유통과 지역푸드플랜담당 신설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조직 확대 필요 - 신기후체제 담당 신설	반영(기후대기과 내 미세먼지담당 신설)	
MICE산업 담당	관광진흥과 내 MICE산업 담당 신설 검토	관광진흥과 MICE산업담당 신설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광 역교통추진 담당 필요	교통정책과 광역교통담당 신설	

위원회·협의체(7)

구분	추진방안
사회적 경제위원회	○경남 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적 경제 위원회 신설 필요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토록 권고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기존 경남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문화예술협치위원회로 확대 재구성 ○자문기능에서 정책제안기능까지 확대
합의제 감사위원회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으로 공정한 감사실현을 위해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후 신설 필요
도정 4개년계획 과제추진 위원회 조례	○도정 4개년계획 추진 지원 및 점검을 위해 필요
경남상생협의회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갈등해소 등 심의자문 역할의 협의회 신설 필요 ○경남상생조례 제정 후 갑질신고센터도 포함
먹거리시민위원회	○계획 수립단계부터 도민 공감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기구인 가칭 ‘바른먹거리위원회’, 또는 ‘희망먹거리위원회’ 신설 필요
농어업특별위원회	○현장 농어업인의 농정불신 해소와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과 제도 개선 등 민관협치 농정을 실현하는 도지사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신설 필요

공기업·출자출연기관(3)

구분	추진방안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현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확대개편 또는 별도 법인설립 검토 필요
경남문화재단	○타당성 조사용역 후 조례개정, 재단설립 등 준비를 거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관분리(경남문화재단, 경남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후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신설 필요 - 창원컨벤션센터, 경남컨벤션뷰로 총괄운영 검토

2. 조례 개·제정

구분	조례명	추진방안
개정 (11)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조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행정협의회 운영 사항 포함
	주민참여예산조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필요 → 2018. 6. 28. 개정
	경남도정자문위원회	○개정 필요
	도민참여센터 조례	○도민참여센터를 행정조직에 포함시킬 경우 별도 제정 불필요.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개정 필요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신설을 위해 개정 필요 → 2019. 3. 28. 개정
	non-GMO 친환경급식지원 조례	○공공급식확대 정책 확정, 조직이관 이후 경상남도 학교급식 조례(규칙) 개정
	주민투표조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청구요건 등 가장 완화하여 조례 개정
	조례 발의 조례	
	경남도정배심원제	○개정 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조례	○사업조직, 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 필요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국제통상과에서 관광진흥과 이관

구분	조례명	추진방안
제정 (17)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	○조례 제정 필요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도 필요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조례 제정 필요
	경남상생조례	○조례 제정 필요 ○조례 제정시까지 발생하는 사안은 현재 운영 중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 → 2019. 2. 8. 제정
	도정 4개년계획 과제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제정 필요
	경상남도 미세먼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상위법령 제정시 별도의 도 자체 미세먼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조례 제정 필요 → 2019. 6. 7. 제정
	경상남도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조례	○조례 제정 필요
	생활임금조례	○조례 제정 필요
	건강기본조례	○조례 제정 필요
	경남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조례	○조례 제정 필요 → 2019. 1. 3. 제정
	경남콘텐츠산업 육성조례	○조례 제정 필요 → 2019. 1. 3. 제정
	영상산업 육성조례	○조례 제정 필요 → 2019. 1. 3. 제정
	예술인복지 조례	○조례 제정 필요 → 2019. 1. 3. 제정
	주민소환조례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에 청구요건 등 필요규정이 모두 포함 ○아울러 조례 위임사항이 없고, 조례로 별도 정할 영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불로 ○법률 개정시 조례 위임사항이 신설되면 조례 제정 필요
	국민소송제	○법 개정 선행, 조례 제정 필요
	경상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필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필요

4 2019년 경남도 핵심과제 및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2019년 경남도 핵심과제

순번	과 제 명	실 국 명
1	데이터기반의 스마트행정 및 업무관리시스템 혁신	기획조정실
2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점검으로 안전경남 구축	(2-1)재난안전건설본부 (2-2)소방본부
3	스마트공장 확산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국
4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재도전 활성화 지원	일자리경제국
5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행정국
6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체계강화	행정국
7	경남중심 항만재편을 통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해양수산국
8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도시교통국
9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체육국
10	의료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및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복지보건국
11	서부경남 KTX 추진 및 신성장 경제권 구축 마스터플랜 마련	서부권개발국
12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민 소득 보장	농정국
13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산림국
14	청년에 의한 경남형 청년정책 추진	사회혁신추진단
15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16	사회적 가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정혁신	도정혁신추진단

▣ 도정자문위원회 신규제안과제

목표	전략	신규제안과제
목표1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혁신 전략 기획단(T/F)구성 ◦ 경남 신성장 산업 전략 기획단 신설 ◦ 서부경남 신성장 상생기금 조성
	전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없는 여성지원 프로그램 신설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회적경제육성 전략기획단(T/F) 신설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제정 ◦ 조사분석의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 농촌형 활동가 양성 및 일자리 제공사업
목표2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설립 ◦ 경남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조례제정 ◦ 청년 박람회 혹은 청년 대토론회 개최 ◦ 청년복합센터건립
	전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전문가 채용배치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 수자원 관리과 신설 ◦ 녹조발생시 상수원수 및 수돗물 조류독소 평가단 발족
	전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문화예술도시 재생 지원단 설립 ◦ 스포츠전지훈련 지원센터 설립 ◦ 경남체육회관 건립 ◦ 경남 관광 품질인증제 및 서비스품질보증제 도입 ◦ 주요 관광지 관광경찰도입 ◦ 웰니스관광센터 설립
	전략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남부건축·디자인센터 구축 ◦ 스마트시티 유치자문단 구성 ◦ 공공체육시설 18시간 운영개방 ◦ 경전선 고속철도화
목표3	전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주민참여조례제정 ◦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구축
	전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 전개 ◦ 공공건물 로비 및 외부공간 시민개방 추진 ◦ 청소년 및 청년 복합 센터 건립 ◦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민원·홍보와 관련된 조직의 통합개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기획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경제혁신분과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운영위원)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헌규	변호사
	박민원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유남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기획위원)
	정석찬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조영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민생분과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운영위원)(기획위원)
	김남길	경상대학교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교수
	김훈규	사단법인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문화복지분과	장동석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운영위원회 간사)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기획위원)
	박명덕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운영위원)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어석홍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기획위원)
	이성기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과 교수
	정규식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전문위원)
	김현준	경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전문위원)
사회혁신분과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운영위원)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운영위원)
	안차수	경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보주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정원각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사무국장(운영위원)(기획위원)
	최승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전문위원)
	최덕철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운영위원)